

맞춤형급여 신청·접수 시·군·구별 자율목표관리제 운영

□ 신청·접수 자율목표 설정 목적

- 2015. 7월부터 맞춤형급여 시행을 앞두고,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, 여러 대내외적 여건으로 수급권자의 신청 현황이 우려스러운 상황
- '15년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빠짐없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,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발굴·지원 필요
- 2주간의 집중신청 기간 중 시·군·구별 신청·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신청·접수 진척도가 미진한 지자체가 확인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필요

□ 신청·접수 목표 도출

- '15. 7월말까지 신청·접수 수급권자 가구 수 전국 목표 : 180,000가구
 - 목표치 18만 가구는 시·군·구가 보장 결정하는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·접수 목표 (교육급여·수급자 제외)
- 맞춤형급여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'15.12월말 까지 16만 가구 2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
- 신청가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결정 비율을 약 70% 수준으로 설정시,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6~7월 2개월 내에 연내 총 신청자의 50%가 신청하는 경우, 신청자는 18만 가구이며 이중 약 12.6만 가구가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 될 것으로 추정

※ 연내 목표 16만 가구의 약 80% 수준

□ 신청·접수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 요청

- 현재 서류를 징구한 수급권자의 정보는 즉시 행복e음에 입력
 - 지자체 별로 업무 형태가 달라 신청을 서류구비가 완비 된 이후 입력하는 지자체와 일부라도 준비되면 입력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신청자 추이를 판단하기 곤란하기에 일부 준비시라도 입력 관리
 - ※ 민원사무 처리 일자는 행복e음에서 “접수처리” 이후부터 계산되기에 신청 정보 입력 적극 이행 요망
- 지역 맞춤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 이행
 - 예 : 각종 차상위 계층에 대한 맞춤형급여 안내문 발송,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, 복지관 등 민간기관 종사자 설명회, 농어촌 지역의 1마을 1가구 사각지대 찾기 운동 등
 - ※ 우리부에서 제안한 신청접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(6.15일까지 신청접수 통계상 우리부 제안 목표를 4%만 달성한 지자체도 있는 상태, 최고 지자체는 69% 달성)

□ 시·군·구별 신청·접수 달성을 위한 자율목표관리

- 금번에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수급권자는 그동안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제도를 통하여 보장중이던 국민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,
 - 우리부에서 <붙임> 엑셀자료로 안내한 시·군·구별 신청·접수 목표 제안 수치는 각 시·군·구에서 보장중인 기초생활 수급자가구 (40%반영) 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관리중인 가구(60% 반영)를 조합하여 도출 (2014.12월말 기준)
- 각 시·군·구에서는 우리부에서 제안한 목표치를 참조하여
 - 지난 2주간의 신청·접수 추이
 - 행복e음에 입력하지 않은 서류제출 수급권자 현황
 - 차상위 계층 중 맞춤형급여로 진입이 가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7월말까지의 신청·접수 목표를 설정·제출.

□ 신청·접수 달성을 위한 자율목표 제출

보장결정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에 지자체의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·접수자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관심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해당

- 제출일 : 2015. 6. 18일 (목) 까지
- 제출양식 : 붙임 엑셀 자료에 7월말까지 예상되는 신청·접수 자율목표 수치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
- 자율목표 달성을 공개 : 시·군·구에서 설정 제출한 신청·접수 목표치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시·도-시·군·구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독려
- ※ 우리부에서는 연말 맞춤형급여 시·군·구 평가를 통하여 기관 및 관계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